

드루킹 사태에 추가대책 내놓은 네이버

“더이상 뉴스편집 안한다… 댓글 허용도 언론사가 결정”

네이버 공간·기술만 지원 방침
3분기 내 모바일 첫화면 재편
뉴스·실검 제외, 검색중심으로
소셜계정 통한 댓글작성도 제한

“네이버는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네이버가 뉴스 및 댓글의 개선 방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는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역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같이 30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모두 동일한 뉴스를 보고, 동일한 실시간급상승 검색어를 보는 구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힘들어졌다”며 “네이버는 뉴스 편집의 구조를 깨고 공간과 기술만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나며 본연의 모습인 정보와 기술 플랫폼에서 그답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3분기 내 모바일 첫 화면에 뉴스와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를 첫 화면에서 제외하고 검색 중심으로 화면을 재편한다. 몇 개의 뉴스와 검색어에 집중됐던 관심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네이버 뉴스 및 뉴스 댓글 서비스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관련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현재는 모바일 첫화면에 뉴스와 실검 순위가 노출된다. 실검 서비스는 사용자가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로 바뀔 예정이다.

네이버 편집자가 기사 배열도 하지 않는다. 네이버는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선정해 편집하는 ‘뉴스판’을 신설해 네이버 모바일 두 번째 화면에 배치한다. 해당 광고 이외과 독자 데이터까지 모두 언론

에 제공해 네이버는 공간과 기술만 지원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 ‘뉴스피드 판’도 추가된다. 인공지능 추천 기술인 ‘에어스(AIRS)’가 개인의 뉴스 성향을 학습하고 예측해 관심 뉴스를 추천해준다. 개인 추천 뉴스에 적용된 알고리즘은 전면 적용하기 전에 외부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쓴 언론

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구글식 아웃링크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다만 한 대표는 “전재료를 바탕으로 한 언론사와의 기존 비즈니스 계약, 아웃링크 도입에 대한 언론사들의 엇갈리는 의견으로 인해 일괄적인 아웃링크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언론사와 개별 협의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구글식 아웃링크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사용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 나간다.

여론 조작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매크로 등을 막기 위해 댓글 정책과 시스템도 개편한다.

정치, 사회 섹션 등의 뉴스 댓글 허용 여부, 댓글 정렬 방식 등은 해당 언론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로 바뀐다.

계정(ID)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소셜 계정을 통한 댓글 작성이 제한된다. 소셜 계정은 휴대전화 번호 등의 인증이 없어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 매크로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하나의 계정을 기준으로, 기사당 댓글 작성 수는 하루 3개, 공감·비공감 참여 수는 하루 50개로 제한된 댓글 제한 정

책을 동일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기반으로 가입한 3개 계정에 통합 적용한다.

매크로 공격에 대해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대응한다.

특히 선거 기간 동안에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수준에 따라 캡챠(CAPTCHA)를 통해 매크로인지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일정 시간 동안 특정 IP, 계정의 댓글 쓰기·공감 활동을 제한하며 타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에 대해선 계정보호 조치 후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 한다.

주적 가능한 매크로나 댓글 조작 단체로 의심되는 정황 발견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네이버는 선거 기간 동안 댓글 영역에서의 매크로 모니터링 및 대응 결과를 공개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를 고려해 단기적인 대응 방안도 적극 시행한다. 선거 기간까지 정치·선거기사 댓글은 최신순으로만 정렬하고, 사용자가 댓글 영역을 클릭했을 때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대심제’ 적용

금감원-삼성바이오, 공방 예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는 금융당국의 감리위원회가 ‘대심제’로 열린다. 이에 따라 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면서 최종 제재 결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를 대심제로 열 예획이다.

대심제는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제재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금융위에 대심제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감리위 심의 팬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 관계자가 동시에 입장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금감원 회계조사국이 감리위에 분식회계 증 및 의견을 제시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와 변호사가 반대 주장을 펴게 된다. 감리위는 금감원 관계자가 사건 내용 설명 후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입회해 의견을 진술하고 감리위원들이 논의하는 식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다롄 동쪽 외곽 해변에 있는 방추이다오 영빈관에서 오찬을 가지고 있다. 김 위원장 원쪽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시 주석 오른쪽은 쟁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연합뉴스

“北 중앙銀 단일체제… 정상화 위해 분권화 필요”

신한금융 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최근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둘러싸고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 북한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은행이 재정, 발권, 여수신 등을 모든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단일화 시스템으로 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선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신한금융지주 내 연구조직 미래

전략연구소가 과거 작성한 ‘북한의 경제 및 금융현황과 남북한 경제협력 단계별 주요 이슈 전망’에 따르면 조선중앙은행은 국가 계획에 따라 기관(공기업)과 기업소(일반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배분하고 기관·기업소간 거래도 직접 관리한다.

자금 배분 형태는 재정을 무상으로 주는 ‘자금공급’과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이 있다. 그러나 대출은 상환의무가 강하

게 부여되지 않는다. 또 북한 주민은 대출이 허용되지 않고 자발적인 저금 유인책도 없어 북한 주민의 제도권 금융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은 예산집행(재정), 발권(중앙은행), 여·수신(상업은행), 일부 보험 등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사실상 제도권 금융은 중앙은행에서만 이뤄지는 셈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증권사 32곳 등 주식매매 내부통제 점검

삼성證 배당사고 재발방지 위해
금감원, 내달 1일까지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은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을 대상으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을 다음 달 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검사 중이거나 검사를 마친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채권증개기관인 KID B를 제외한 국내 증권사 30곳과 외국 증권사 중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안타증권, 씨에스증권이 이번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계기로 주식매매와 관련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감독국장을 단장으로 금융유관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점검자문단을 구성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 프로세스를 선정하고 현장점검시 점검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현장점검은 금융투자검사국장을 단장으로 금융투자검사국과 한국거래소 등 금융유관기관 직원 등으로 4개 점검반이 투입된다.

금감원은 ▲증권사 입출금·입출고 및 매매주문 과정 내부통제시스템 ▲증자, 배당 등 권리배정 업무의 내부통제시스템 ▲고의·착오 입력 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절차 ▲공매도·대차거래 주문 처리 절차 ▲사고주식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

3D프린팅 기술, 1.6조 발전소 정비시장 진출

산업부-발전公 6社, 시범사업 MOU

3D프린팅 기술이 1조6000억 규모의 발전소 정비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에서 발전공기업 6개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부터 발전소 정비부품을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은 발전소 정비작업에 소요되는 부품을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발전소에서 실제 사용해보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제조 혁신을 리딩하는 3D 프린팅 기술은 정밀도, 속도, 소재 등의 개선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의식주를 비롯해 의료, 항공, 자동차, 조선, 기계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GE,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가스터빈이나 결수로의 핵심부품까지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제작하고 발전사에 공급해 제작기간 50% 단축, 터빈효율 64% 향상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하지만 국내 발전사는 R&D 부서 중심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손상·마모 부품에 대한 보수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벨브와 같은 일부 소형부품 시제작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전국 발전소를 직접 방문해 3D 프린팅 기술을 설명하고, 예방정비 기간 동안 해체된 발전소에 직접 들어가 부품들을 확인하는 등 3D 프린팅 기술 보급을 위한 노력들을 추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3D 프린터로 제작이 비교적 쉽고 실장(實裝) 부품이 적은 2종을 발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5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개발·제작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